



간담회 통해 현장목소리 들어

## 한국오리협회 지회·지부 간담회

협회가 전국 지회·지부 방역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광주·전남도지회를 시작으로 전북, 경남·북, 충남·북, 경기 등 7회의 방역교육 및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교육 및 간담회 일정은 공통적으로 반석가금연구소 손영호 소장의 '오리농가 시 차단방역 요령' 교육을 시작으로 협회의 업무 보고 및 간담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지회의 여건에 따라 농림부 인사가 방역 정책과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농가들의 궁

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만섭 협회장은 광주·전남도지회에 방문해 “코로나 19로 인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역교육과 간담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농가 분들의 고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오리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회·지부 방역교육 및 간담회 개최 일정

날짜	도지회	장소	시간
6월 22일	광주 전남도지회	전남 영암축협 2층 대회의실	10:00 ~ 12:00
			13:00 ~ 15:00
6월 23일	전북도지회	정읍시청 2청사	16:00~17:00
6월 24일	경남도지회	거창 농업인회관	10:00~11:50
	경북도지회	하나로마트 안정농협 회의실	15:00~16:50
7월 1일	경기도지회	오리명가(안성)	12:00~13:50
7월 5일	충북도지회	민속가든(진천)	12:00~13:50

## 토종닭·오리업계 “손실보상법, 핀셋대책 강구해달라”

토종닭·오리업계가 "정부 방역 정책 인해 발생한 누적 영업 손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에 대한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과 이자 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의결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사)한국오리협회장은 "토종닭·오리산업(생산·유통·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농원)에 대해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법과 시행규칙·시행령 등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가 큰 업종(관광농원·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객 방문이 '올스톱'됐다며 토종닭·오리산업과 직결되는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생·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산자위·문체위 등 각 상임위 칸



막이를 허물고 토종닭·오리산업 홍보 및 관광농원(여행·숙박) 예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난지원은 손실보상과 별개라면서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음식점·생산·

유통) 중소기업·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업종·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 소급효)'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최근 3년까지의 카드 매출전표 및 국세청 신고 영업 실적 등을 참고해 토종닭·오리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방역 행정명령 근거)가 누락됐음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입법 불비'로 인해 많은 토종닭·오리산업 종사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토종닭·오리산업 관계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실보상법안 조항 또는 부칙에 소급적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과 토종닭·오리산업 모든 분야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전신문〉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안 초안마련

## 고병원성 AI 방역 잘한 농가 살처분 대상 제외

질병관리등급제가 도입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500m 이내 가금농장은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제도다. 농가의 자율적 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련 축산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가 입수한 농식품부의 초안에 따르면 농가 유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발생농장 반경 500m 내는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농가 유형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방역관리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등의 요소를 평가해 세가지(가·나·다)로 분류한다.

가·나 유형은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과 방역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이 없다면 '가' 유형,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 유형은 강화된 시설·장

비 기준과 방역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가 해당된다.

'가' 유형은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될 때 세가지 선택권을 갖게 된다. 선택권은 모든 예방적 살처분(500m~3km) 제외, 일부(1~3km) 제외, 예방적 살처분 수용이다.

'나' 유형은 반경 1km 내에 발생농장이 위치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나, 1~3km 범위에서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현행 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되면 가·나 유형 농가의 선택권도 조정된다. 참여농가에는 책임도 부여한다.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하향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소독설비·방역시설·법적 관리 및 준수 사항 등의 평가기준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참여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농가 유형 분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TF팀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 축단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축산발전 기금 축소,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가 공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월 22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으며, 7월 중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축산업비대위는 △축산발전과제 대선공약 채택 △대체 단백질 관련 범 축산업계 대응 방안 강구 △축산업 환경 규제(탄소중립, 양분관리제 등) 해결을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축단협 대표자들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축산발전 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등 굵직한 축산 현안이 있지만 농식품부가 축산단체들을 위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비판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축산농정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축단협 차원에서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축종을 불문하고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임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축단협의 구심점 역할과 대외활동 강화를 통해 '강한 축단협'으로 거듭나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9천789호 점검 결과, 189호 과태료 처분

##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을 실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천789농가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6월 현재 9천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천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천011호(20.5%)로 이중 189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축종별 위반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또한, 위반율

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순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적정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대상 자체 준수이행 홍보를 강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약취 발생,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축산업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 (주)삼호유향오리, 참좋은푸드마켓뱅크에 물품후원 협약

정읍시 고부면 소재 (주)삼호유향오리(대표 이세중)가 정읍 참좋은푸드마켓·뱅크(이사장 유영준, 운영위원장 박종범)에 지속적인 후원을 협약했다.

최근 정읍 참좋은푸드마켓·뱅크를 방문한 이세중 회장과 이봉형 고문, 박효수 마케팅 이사등 임원진은 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오리알과 훈제오리를 지속 후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정읍시 연지동에 개장한 참좋은푸드마켓·

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필수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랑의 장터다.

생산·유통·판매·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과 생필품 등을 대상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회원사  
신제품  
출시

## 주원산오리, ‘건강한오리’



‘건강한오리’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오리 전용사료로 키운 오리만을 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주)주원산오리는 건강한오리 통오리, 건강한오리 슬라이스, 건강한오리 다리살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 참프레, ‘싸먹는 오리슬라이스’

참프레가 밥에 싸먹기 좋은 ‘싸먹는 오리슬라이스’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싸먹는 오리슬라이스’는 국내산 오리고기 원료육을 사용했으며 밥에 싸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 돼 있어 먹기 편리하다. 또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게 넉넉한 500g 단량으로 생산됐으며 기름 없이 후라이팬 중불에 1~2분 정도 구워서 먹거나 전자렌진지에 3~4분 데워서 먹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 다향, ‘고향의 장맛 오리주물럭 매운맛’

다향은 국내산 오리고기로 만들어 쫄깃하고 매콤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고향의장맛 오리주물럭 매운맛’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의장맛 오리주물럭 매운맛’은 염선한 국내산 오리의 뼈를 제거한 고기를 사용했다. 양념에 재워져 있어 따로 간을 내거나 양념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

